

이통사도 코로나19 ‘고통분담’... 통신비 감면 검토

피해대상·지역 등 범위 특정 어려워
정부 의지에 통신비 감면여부 달려
“정부 주도에 자발적으로 시행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이 3일 ‘코로나19 대비 방송-통신-인터넷서비스비상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통신비 감면에 대해서도 논의의 물꼬를 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신비 감면을 시행한다고 해도 강제력이 있지 않고 코로나19 피해 대상이나 지역 등의 범위를 특정하기도 까다로운 난항이 예상된다.

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대비 방송-통신-인터넷서비스비상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열고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망 지원방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KT는 자사 대리점에 2월 임대

료 지원(대구·경북 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30%),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 대해 약 24억원 규모로 3개월간 임대료 감면(대구·경북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20%)을 추진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월 인건비, 월세 등 매장 운영자금 25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SK텔레콤도 조만간 이르면 5월

코로나19 피해 관련 직영 유통망·협력사 등에 대한 상생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피해 지원을 위한 통신비 감면은 지난 2015년 전국을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이동통신사는 LG유플러스의 주도로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의 한달 통신비를 면제하는 등 유무선 통신비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메르스 피해 고객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ICT를 통해 적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시 2015년 5월 20일 첫 메르스 환자 발생 후 총 186명이 감염됐고, 사망자 수는 38명에 달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이날 기준 확진자 5328명, 사망자 33명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통신비 감면에 대해서는 논의 단계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 메르스 사태 때와 달리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대구·경북 지역을 위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일반 천재지변과 달리 지역을 한정짓기가 어려워 피해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 이동통신사는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사태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에는 통신비 감면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지진사태는 피해 지역이 포항시로 한정돼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것이 까다롭지 않았다.

법적인 강제력도 없다. 지난 2018년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 당시 KT는 아현지사 화재 피해 가입자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이는 통신사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약관 상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의무적으로 통신비 감면을 이행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이뤄진 통신비 감면 또한 이

동통신사가 정부와 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면 통신비 감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통신비 감면 적용 대상과 지역 등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통신비 감면을 하게 되면 정부가 키를 쥐고 주도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감면의 경우 이동통신 3사가 모여 논의를 해서 정해야 한다”며 “통신비 감면이 이뤄지면 정부 주도 하에 이동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면 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한진칼 지분전쟁, 궁지 몰리는 땅콩연합

반도, 주주제안 자격 논란... 보유기간 미달

조원태 회장, 델타항공 매입 41.75%
주주연합, KCGI 지분 매집 37.62%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더 격화되는 모양새다.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주주연합의 지분 확보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KCGI와 델타항공 등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 회장의 우호 지분이 더 우세한 상황이며 주주연합은 반도건설의 자격 요건 논란, 의안상정 가처분신청 결정보류 등으로 점차 궁지에 몰리는 모습이다. 벌써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주주연합이 장기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주주연합은 연일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 지난 3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주식 32만2200주(0.54%)를 추가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KCGI

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기존 17.14%에서 17.68%로 확대됐다.

이에 맞서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로 분류되는 델타항공도 지난달 24일 1%를 추가 매입한 데 이어, 최근 2.5%를 더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7일로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 확보 전쟁에 나선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양측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추산하면 약 4.13% 차이로 조 회장 측이 우세하다. 주주연합은 이번 KCGI의 지분 매집으로 지난 20일 기준 기존 37.08%에서 37.62%가 됐다.

반면 조 회장의 우호 지분은 한진 총수일가(18.3%)와 재단 등 특수 관계인(4.15%)에 더불어, 백기사 델타항공(13.5%)과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카카오(2%),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자보험·사우회(3.80%)까지 합해 41.75%다.

지분 확보에서도 열세에 놓인 주주연합은 해당 지분이 갖는 주주제안의 정당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반도건설의 첫 주식 취득시점이 주주명부 폐쇄 6개

월 전인 지난해 6월부터 보유했던 것인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반도건설의 계열사 대호개발은 지난해 10월 8일 한진칼 지분 5.06%를 보유했다고 첫 공시했다. 상법상 주주제안을 하려면 해당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실제 지난해 주총에서도 KCGI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의안상정 가처분신청까지 했으나 결국 주주제안을 상정하지 못한 바 있다. 올해 주총에서도 이같은 ‘골목’이 반복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에도 주주연합은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달 27일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에 앞서 제출한 정관 변경 안건·사내외 이사 선임의 건 등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가처분신청에 대해 ‘결정 보류’ 처분을 내렸다.

한진칼이 주주제안을 이사회에서 다루겠다고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당장 가처분신청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성급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한진그룹, 주총 앞두고 사외이사진 보강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진그룹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이날 오전 서소문 대한항공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오는 27일 주총에서 표결할 안건을 심의 및 확정했다.

지난달 이사회에서 ‘우한 전세기’ 탑승에 따른 자가 격리로 화상으로 회의를 주재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이날은 이사회에 직접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

서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이사 재선임안과 함께 사외이사를 보강하는 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진칼 등기이사는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 고(故) 조양호 회장의 오른팔로 불린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사장) 등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원래 한진칼 사내이사는 조양호 회장까지 3명이었지만 작년 4월 갑작스런 별세로 현재 공석인 상태다. 사외이사 중 1명인 이석우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도 이달 임기가



한진그룹전경

/한진그룹

만료된다.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 임기가 최대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이미 한 차례 연임한 이 변호사는 이번에 교체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조 회장의 연임을 가결할 경우 한진칼의 이사진은 5명이 된다.

/김수지 기자



KT의 알뜰폰 자회사 KT 엠모바일은 코로나19로 대리점을 통한 가입을 자제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직영 온라인 몰에서 가입하는 모든 유심, 단말 고객에게 가입비와 배송비,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 또 서울권 고객 중 당일 정오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당일 유심 특급 배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모델들이 KT엠모바일의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있다. /KT엠모바일

온라인몰에서 가입하면 배송비·위약금 면제

“급식·식자재분야 경쟁력 ↑ 식품제조사업 본격 진출”

현대그린푸드 스마트 푸드센터
B2B·B2C 제품 생산 함께 진행

현대그린푸드가 833억 원을 투자한 ‘스마트 푸드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식품제조사업에 뛰어든다. 기존 단체급식사업과 식자재 유통사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로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현대그린푸드는 경기도 성남시 스마트 푸드센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 푸드센터는 현대그린푸드의 첫번째 식품 제조 시설(2개 층)로 연면적 2만㎡(약 6050평) 규모로 조성됐다.

스마트 푸드센터는 단일 공장에서 단체급식업체 최초로 B2B와 B2C 제품 생산이 함께 이뤄지는 ‘하이브리드(Hybrid)형 팩토리 시스템’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통상 식품제조 공장들은 B2B(기업 간 거래)와 B2C 제품 제조 시설을 각각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회사 측은 “첨단 하이브리드형 팩토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 기존 투자계획(761억원)보다 투자 금

액을 10% 가량 늘렸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리드형 팩토리 시스템은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와 소품종 대량생산 체계를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스마트 푸드센터에서는 동시에 300여 종의 B2B·B2C용 완제품 및 반조리 식품을 하루 평균 50여 톤(약 20만 명분) 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 총 생산 가능 품목은 단체급식업체 최다인 1000여 종 수준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스마트 푸드센터 가동을 시작으로 B2C와 B2B 식품제조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먼저 B2C 시장 공략을 위해 프리미엄 가정 간편식(HMR)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 생산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푸드센터에서 생산가능한 품목(1,000여 종) 중 70%는 완전 조리된 HMR과 반(半)조리된 밀키트(Meal Kit) 등 B2C 제품으로 채울 계획이다.

아울러 최신식 제과제빵 설비 또한 갖춰, 지난해부터 현대그린푸드가 공을 들이고 있는 호텔 컨디션 사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민지 기자 kmj@